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검 토 보 고 서**

<제208회 임시회>

2012. 5. 21.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신 후 남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2년 5월 11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행정지원과)
3. 개정이유

○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 명시,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 범위 확대 등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개정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가.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인사위원회) 명시(안 제5조제1항, 제2항)
- 나.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2종→4종) (안 제5조제3항 제3호, 제4호)
 -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
 - 직제 및 정원 변경으로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
- 다.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준용근거 마련(안 제5조제4항)
- 라.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안 제5조의2)
 - 필요시 상호간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
- 마. 장애인 차별 시정(안 제10조 제1호 삭제)
 -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정신상의 사유 삭제

- 바. 질병휴직 등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 (안 제11조제1항)
-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정원 인정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 시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 보충 가능

5.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7조, 제41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및 제65조의2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개정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등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여 임용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실시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휴직으로 인한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 등의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본 개정안은 상위법과 표준 조례안에 근거한 적정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법”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를 “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 대구광역시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

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상당계급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제5조제3항제3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별정직 직위 상당계급 정원과 현원간의 불일치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 ————— ————— ————— —————.
제2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생략) 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조(적용범위)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 ②(현행과 같음) ③————— ————— 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 ————— —————.
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 대구광역시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p><u>②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u>1. 비서관 및 비서</u></p> <p><u>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초빙하는 경우 등)</u></p> <p><u><신 설></u></p>	<p><u>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u></p> <p><u>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u></p> <p><u>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u></p> <p><u>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u></p> <p><u>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u></p>
--	--

<p>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u>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u></p> <p>1. <u>신체·정신상의 장애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부터 제24조 까지</u>의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p> <p>2. ~ 4. (생략)</p> <p>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u>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u></p> <p>② (생략)</p>	<p>제10조(직권면직)----- ----- ----- -----</p> <p><삭 제></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u>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	--

붙임 3)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 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1조(휴직자·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① 공무원이 제6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할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더라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

제63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4.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8.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성공무원은 3년) 이내로 한다.
9. 제63조제2항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5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제65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① (생략)

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6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8호·제9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④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①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②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과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檢定)한다.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④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실형, 실습이나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제45조(임용시험의 단계) ① 임용시험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과 제3차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업무 내용이 특수한 직급의 임용시험에서는 시험실시기관

이 시험 실시 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되,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해야만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직시험과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을 제1항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할 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前) 단계 시험의 합격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48조(시험위원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과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출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모든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이 영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⑤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시험관리관·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차별금지) ①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12년 5월 11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치수방재과)
3. 개정이유

○ 소하천정비법 및 관계법령(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대해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경작목적의 점용산정기준을 인근 유사지 농지 소득금액의 5/100에서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으로 개정함.
(안 제2조 별표1)
- 나. 해당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 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시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조정함. (안 제4조)

5. 관계법령

- 「소하천정비법」 제22조
-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제15조의2
- 「지방세기본법」 제80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작목적의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농지 소득금액에서
토지가격으로 변경하여 점용료 등을 징수코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 또한 산정된 점용료가 전년도 보다 5퍼센트이상 증가할 때에도
최대 5퍼센트 증가한 금액으로 점용료를 징수함으로써
매년 상승되는 토지가격 대비 점용료 부담이 경감되는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본 조례안은
소하천의 효율적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2조에 따라”로 하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사용료의”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점용료 등은”을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으로, “600원미만”을 “2,000원미만”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당해 년도의”를 “해당 연도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5항 중 “소하천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으로 하고 “당해년도별 점용료를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별 점용료를 합산한 금액의 120/100”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및 조정)①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②군수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조정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 등의 전액을 징수하고,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은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해당 연도 이후의 점용료 등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 ②「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무단점용 또는 사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③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점용료 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연4회 이하로 나누어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④제3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징수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기타의”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조건 없이 하천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제8조제1항을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별표1, 별표2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점 용 료 등 산 정 기 준 표 (제 2조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소하천 부지)의 점용	<p>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p> <p>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가격의 2.5/100. 다만, 76.8.7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분배 계약을 체결할 경우 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p> <p>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소하천구역내의 토석, 모래·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p> <p>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0.75/100</p> <p>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p> <p>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가격의 5/100</p> <p>사. 기타목적용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p>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	제1항에 준한다.

구 분	산 정 기 준
4. 유수의 점용	<p>가. 전기사업 연액 m^3/sec당 200,000원</p> <p>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포함) 관경 25m/m이하 월액 5,000원 관경 50m/m까지 월액 20,000원 30,000원 관경 100m/m까지 월액 50,000원 관경 200m/m까지 월액 60,000원 관경 300m/m까지 월액 80,000원 관경 75m/m까지 월액 관경 400m/m까지 월액 110,000원 관경 500m/m까지 월액 140,000원 관경 600m/m까지 월액 190,000원 관경 700m/m까지 월액 250,000원 관경 800m/m까지 월액 300,000원</p> <p>자연취수 및 810m/m이상은 월최대 취수가능량을 산정하여 1,000m^3당 100원씩 적용 ※ 동일인이 동일지역에서 동일목적으로 수개의취수관으로 취수한 경우 점용료등은 관별 최대취수량을 산정 합산하여 전기기준 해당 점용료등 적용</p> <p>다. 농업용수 0.05~0.5m^3/sec까지 연액 10,000원 0.5m^3/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p>
5. 지하의 유수채취	제4항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	<p>가. 공업용수의 배수 월10,000m^3~200,000m^3까지 월액 20,000원 월 1,000m^3 증가시마다 50원 가산</p> <p>나. 기타 용수의 배수 기타 소하천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용수는 제외한다. 월10,000m^3~200,000m^3까지월액 15,000원 월 1,000m^3 증가시마다 50원 가산 월10,000m^3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p>

구 분	산 정 기 준
7. 토석, 모래·자갈의 채취	<p>가. 소하천의 경우 군수가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모래·자갈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p> <p>나.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등 2개 기관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p> <p>다.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지역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해당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p> <p>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본 결정금액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p>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항, 점용이 수반 되는 것은 제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 (매점포함)	토지가격의 5/100
10.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전 각 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비고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별표2]

점 용 료 등 감면기준 (제 3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 면 율 (퍼센트)
1.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공사 또는 점용·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일 경우	100퍼센트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 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 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50퍼센트

붙임 2)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 이라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사용료의----- -----.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 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 이라한다)는----- -----2,000원미만----- -----.
②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 년도의 점용기간의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②----- -----해당 연도의----- -----.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규정에 따라----- ----- ----- ----- -----.

<p>⑤ 소하천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p> <p>제3조(점용료 등의 감액) 소하천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그 점용·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점용료 또는 허가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p>	<p>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 -----해당 연도별 점용료를 합산한 금액의 120/100-----.</p> <p>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및 조정)</p> <p>①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p> <p>②군수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조정한다.</p> <p>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p> <p>①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 등의 전액을 징수하고,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은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해당 연도 이후의 점용료 등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p> <p>②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연도별로</p>
--	---

②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나누어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과·징수하되, 무단점용 또는 사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점용료 등의 납부액이 50 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연4 회 이하로 나누어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징수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p>제5조(징수) 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u>기타의</u> 경우 발급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p> <p>② (생략)</p>	<p>제5조(징수) ①----- ----- -----<u>그 밖에</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p> <p><u>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u></p>	<p>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p> <p><u>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u></p> <p>1.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p> <p>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조건 없이 하천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p>
<p>제8조(시행규칙) ①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붙임 3)

관계 법령

[소하천정비법]

-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관리청은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④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사업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과 수수료의 감면 비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제15조의2(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지방세기본법]

제80조(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지방세법]

제197조(정의) 삭제 <2010.1.1>